**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정책과 기술의 차이점**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.

| 구분 | 정책(Policy) | 기술(Technology) |
| --- | --- | --- |
| **정의** | 법·제도, 규정, 행정절차 등 제도적 장치 | 정보시스템, 데이터베이스, AI 등 IT 기반 도구 및 시스템 |
| **주요 수단** | - 부정수급 방지 규정 제정 - 현장점검, 제재조치 - 신고센터 운영 - 자격심사관, 조사관 등 인력 배치 | - 자격 검증 시스템 - 중복·부정수급 자동 모니터링 - 정보 연계 및 데이터 분석 - 실시간 통합관리시스템 |
| **주요 목적** | 부정수급 발생 시 사후 제재, 예방적 경고, 제도적 관리 | 부정수급 사전 차단, 실시간 탐지, 업무 효율화 및 신속 대응 |
| **적용 예시** | - 부정수급 시 환수 및 금전적 제재 - 무관용 원칙, 범죄 수준 부정수급 시 수사의뢰 - 집중 신고기간 운영, 현장점검 강화 | - 사회보장정보시스템(행복e음 등) 통한 정보 연계 -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(e-나라도움) 통한 중복·부정수급 실시간 검증 - AI 기반 위험도 평가 및 모니터링 시스템 |
| **한계 및 보완** | - 인력 및 행정력 소요 - 사후적 대응 중심 | - 시스템 구축·운영 비용 - 데이터 품질 및 연계 한계 |

**정책**은 주로 **법령, 제도, 행정절차**를 통해 부정수급을 예방하고 적발 시 제재를 가하는 방식입니다. 예를 들어, 환수·제재, 수사의뢰, 신고센터 운영, 현장점검 등이 포함됩니다.  
반면, **기술**은 **정보시스템, 데이터 연계, 자동화된 분석** 등을 활용해 **수급 자격 검증, 중복·부정수급 실시간 탐지, 업무 효율화** 등에 초점을 둡니다. 예시로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(행복e음),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, AI 기반 위험도 분석 등이 있습니다.

결국 정책은 **제도적·행정적 틀**을, 기술은 **실질적·실무적 도구**를 제공하며, 두 요소가 상호 보완적으로 결합될 때 부정수급 방지 효과가 극대화됩니다.